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People's Solidarity for Social Progress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259-12 3층 T.02-778-4001. F.02-778-4006 pssp@jinbo.net http://www.pssp.org

2012년 9월 4주차 보건의료동향분석

2012년 9월 8일 ~ 2012년 9월 21일

주요 키워드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능약화 법령 개정 추진 : 최근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고, 기관간의 분절적인 역할 분담을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심평원 역할의 상당부분을 공단에 이관해야 한다는 방안을 발표. 이에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갈등 및 건강보험체계에 있어서의 변화도 예상됨
2. 바이오코리아 2012 : 9월 12일에서 14일까지 진행되어 국내외 500여개 기업이 참가하고, 각종 컨퍼런스 및 전시회 등을 진행함. 행사를 통해 37건의 계약과 1,600억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맺고, 팜페어 프로그램을 통해 800억원 규모의 수출 계약 및 양해각서를 체결
3. 이화의료원 파업 : 9월 5일부터 시작된 파업이 계속되고 있고, 주요 쟁점은 임금인상과 인력충원 등임. 이에 병원측은 노조 무력화를 위해 최근 유성기업 파업 사태 등에 개입하여 사회적 물의를 빚은바 있는 창조노무법인(창조컨설팅) 심종두 노무사와 자문계약을 맺음. 병원측은 산별협약을 무시한 채 파업 장기화와 노조 무력화를 위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이화의료원 지부에 2억원 규모의 지원을 하기도 함

1. 보건의료정책

○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자살예방의 날' 맞이 보고서

WHO는 10일 '세계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내놓은 보고서에서 전쟁과 살인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자살 사망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구촌 사람들은 40초에 1명씩 자살하고, 한국은 OECD 국가 중 8년째 자살률 1위를 기록하였다. 2010년 기준 자살한 사람은 1만 5000여명에 이르고, 이는 빈부 격차와 생활고에 따른 가정불화가 큰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전세계에서 자살로 인한 사망자는 연간 100만명이며 자살 시도자는 2000만명에 이르러 전 세계 인구의 5% 정도가 살아가면서 1번 이상 자살을 시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자살률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 자살률이 60%까지 상승하는 사례도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살률은 리투아니아와 러시아 등 동유럽 국가가 가장 높았고, 미국과 서유럽, 아시아권 국가는 중간 수준,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구촌에서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층은 15~19세 청소년들로 매년 10만명으로 나타났으며 75세 이상 노인들의 자살률도 높았다. 나아가 자살자는 남성이 여성보다 3배 많았으나, 자살 시도자는 여성이 남성보다 3배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전부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의료 현황 및 실태, 인력·예산 등 사업 추진체계 등을 포함해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이나 시·도를 거쳐 복지부에 제출한다. 복지부장관은 인구 수 등 의료수요, 의료자원의 분포, 지리적 접근성 등을 분석해 2년 주기로 의료취약지를 지정·고시한다. 시도지사는 의료취약지 지정목적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해 거점 의료기관을 지정한다. 또 복지부장관은 공급이 부족한 전문분야·지역에 대한 원활한 보건의료 제공을 위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하고, 그 수행결과를 평가한다. 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한다. 복지부는 기본계획 작성지침을 마련해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소관별 기본계획안을 작성해 복지부에 제출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해 매년 1월 31일까지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지역보건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해 시행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추진실적을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응급의료기관 현황과 발전방향 토론회

정은경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비상진료체계 개편 경과 및 현황을 보고했다. 비상진료체계 개편과 관련한 모니터링 결과 129 콜센터로 접수된 민원은 24건이었고, 당직전문의 명단 응급 게시율도 94.7%에 달했다. 하지만 전문의 인력부족, 군소재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당직전문의 운영 제외, 온콜 제도의 운영기준 불명확 등의 문제가 도출되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수가 개편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응급환자는 최종진료가 가능하도록 응급의료센터 중심으로 체계를 개편해 집중지원하고, 비용급환자를 위한 야간과 공휴일 진료체계 구축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개선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의료계·학계·시민단체·언론계 등으로 '응급의료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응급의료전달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안이다.

○ 건강보험재정, 2분기 잉여금 2조 육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일 건강보험 2분기 재정현황을 공개했다. 2분기 재정현황에 따르면, 2분기 건강보험 총수입은 11조7164억원으로 전년 동기 10조 4907억원에 비해 11.7% 늘었다. 올해 건강보험료율이 인상되면서 보험료 수입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총지출은 9조7728억원으로 전년 동기(9조3193억원)대비 4.9% 증가했다. 2분기 잉여금은 전년 동기(1조1714억원)에 비해 7722억원(65.9%) 증가한 1조9436억원을 기록했다. 건강보험 재정상태가 양호해지면서 당분간 제약업계에 정책 리스크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노인 완전틀니 유지관리 급여적용

이번 건정심에서는 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를 급여로 적용하는 방안을 최종 심의하여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시행된 만 75세이상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화에 이어 완전틀니 수리 등을 위한 유지관리가 10월부터 급여로 전환된다. 사후수리 급여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 완전틀니 장착자로서, 완전틀니가 보험급여(7월) 되기 이전에 자부담으로 완전틀니를 제작해 사용하고 있었던 기존 틀니 장착자도 포함된다. 급여로 전환되는 유지관리 행위는 7개 항목(세부분류 9개)이다. 본인부담비율은 50%로 의원을 이용하는 경우 유지관리 항목에 따라 위 금액의 50%인 1만2500~10만4500원만 부담하면 된다.

○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역할 강화 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윤인순 의원은 14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을 확충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행 35명에서 60명으로 늘리고, 심판청구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조사, 분쟁조정위원회 심판청구사건 심리·재결 등의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관련 심판청구가 급증하고 있으나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위원회는 2009~2011년까지 3개년 간 총 890회의 심의를 실시해 3만8414건의 심판청구안을 처리, 이 중 4.5%인 1734건이 권리구제된 것으로 집계됐다. 남 의원은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따라 연

간 1만7000여 건 이상의 심판청구가 접수되고 있으나, 연간 1만건 정도만이 처리되고 있어 올 6월 현재 2만1640건이 미결된 상태이며, 이를 해결하는 데 약 19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의원은 이와 함께 심판청구를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2012년도 2차 회의 논의안건 공개

위원회 논의안건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유전자검사의 합리적 규제방안 마련' 등 2가지를 선정하고, 회의에 앞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17일 밝혔다. 첫 번째 논의안건인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문제는 의료현장에서 환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 고통이 계속되고 있고 공론화 필요성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안건으로 상정됐다. 두 번째 논의 안건인 유전자 검사의 합리적 규제방안 마련과 관련, 유전자검사 기술의 발달은 난치병 치료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있으나 지능·성격·외모·질환과 같은 검증받지 않은 비윤리적 유전자검사로 한 사람의 일생이 미리 예단되고 이에 따른 사회적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도 상존하고 있다. 두 가지 안건의 합리적 규제방안에 대해 찬반의견이나 정책적 대안이 있는 국민들은 10월26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 건보공단 발표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 방안에 부정적 반응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자리에서 자유선진당 문정림 의원은 건보공단 쇄신위원회의 발표 자료에 대해, 이미 보장성 강화 방안의 방향을 다 정해놨던데 복지부와 사전 합의 없이 이런 게 가능하냐며 복지부와 공단이 발표한 쇄신위원회 보고서의 관련 여부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건보공단이 보장성을 정하라고 만든 기관은 아니라며, 보장성은 가입자와 보험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확대해 나가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보장성이 확대되려면 보험료가 올라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함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이 지난 7월 쇄신위원회 활동보고서에서 공개한 필수의료 중심의 보장성 강화 방안은 선택진료와 병실차액 급여제도 개선, 간병서비스 급여, 기타 비급여 항목의 우선순위에 따른 단계적 급여화 등이다.

○ 규제개혁위원회, 간호조무사 양성제한 복지부 방안 반력

규개위는 최근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과 폐지 내용을 담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안'(복지부 안)과 관련하여 이를 복지부에 반력했다. 개정안은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특성화고 및 학원 등으로 제한하려는 방안이다. 이로써 올해 1학년생을 모집한 경기 평택 소재 국제대학 내 간호조무과 신입생 모집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규개위는 자격에 합당한 교육을 이수하는 기준의 상한(특정 학력)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간호인력의 교육수준을 상향함으로써 의료서비스의 질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규개위의 이러한 의견이 확정될 경우 향후 다른 전문대학내 간호조무과 설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규개위는 민간 양성학원,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야기될 수 있는 불이익, 고졸 취업 기회 박탈, 개인·사회적 비용 등의 측면을 간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해외 사례를 찾아 복지부에 근거자료로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 진료비 확인신청 제도, 유명무실 운용 지적

진료비 확인 신청 제도는 병원에 낸 진료비 중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 진료비가 제대로 책정된 것인지 심평원에 확인 요청을 하면 부당청구 여부를 알려주는 제도로 지난 2003년부터 시행돼 왔다. 그러나 심평원이 시행하는 이 제도가 여전히 대형병원 측의 취하 중용에 대해 마땅한 환자 보호책이 없어 유명무실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이 심평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진료비 확인 신청의 취하율이 26%(2008년)에서 17.0%(2012년 7월)로 감소세에 있어 제도 시행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병원별로 보았을 때 상급종합병원의 취하율이 심각한 상태이며, 3년간 취하율이 무려 50%에 육박하는 곳도 있고 수치가 급격히 높아진 곳도 있다

고 지적했다. 취하율이 높은 이유는 진료비 확인 신청 건수가 많아지면 현지조사로 인해 각종 제재를 받을 수 있고, 명성에 해가 되는 것이 두려워서 취하 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에 김의원 측은 환자들이 불이익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고제도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능약화 법령 개정 추진

건보공단은 19일 보건전문지 기자단 워크숍에서 '급여결정 구조 및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청구접수 절차 개선, 건강보험재정 관리자로서 공단 사후관리 역할 강화, 보험급여 결정에서의 거버넌스 재정립 등의 방안을 법령으로 명확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건강보험 구조에서 큰 틀의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고, 급여결정 등을 둘러싼 관련 기관간의 역할분담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진 구조로 인해 재정 책임성과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능간의 부조화가 발생된다고 주장했다. 공단은 쇄신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지출관리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약가 결정 과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현재 심평원이 하는 역할을 일정부분 또는 상당부분 공단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의미여서 심평원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의약품의 가격관련 사항인 경제성 평가는 공단의 약가협상 절차대로 귀속시키는 한편, 제네릭 의약품의 가격결정도 신약과 마찬가지로 보험자가 관리함으로써 지출관리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공단의 의견이다. 심평원 산하에서 운영 중인 약제급여평가심의위원회를 공단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는 급여 결정부터 보험자가 책임지고 수행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서 나온 것으로, 급여 결정에서 현재의 의료공급자 중심의 위원회 인적구성을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건강보험에서 비용이 지급되는 요양기관을 현지확인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재정관리자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진료비는 당연히 지불책임이 있는 보험자에게 직접 청구하도록 개선하고, 보험자가 판단해 전문심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심사를 위탁하도록 하는 등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건강보험료 체납액 2조원 초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말 기준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총 2조418억원(154만1000건)으로, 2011년말 기준 1조9992억원보다 425억원이 증가했다. 고액재산가들처럼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건보료를 체납하는 납부자들이라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경기 불황으로 소득이 줄어 생계마저 위협받는 체납 세대가 있는가 하면, 수백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하고도 고의로 건보료를 체납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다.

○ 보건복지부, 의료분쟁조정제도·하위법령 개정 착수

복지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출범 이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법령의 문제점 및 미비사항, 의료계 등의 요구사항 등을 검토해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중재신청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소송사건(법원의 확정판결)까지로 확대해 보상의 대상사건을 확대했다. 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전문적 심의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 마련되고, 손해배상금 대불비용의 환급 및 대불의 청구와 대불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 마련됐다. 대불비용 납부자가 보건의료기관의 폐업 등 보건의료업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납부한 대불비용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9월말 내부 안을 마련해 10월 중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학회는 그동안 논란이 된 산부인과 의사의 분담 부분에 대한 개정이 없음에 유감을 표한다며, 무과실 의료사고의 보상에 대해 기존의 정부와 산부인과 의사의 7:3 구조와는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환자 입장에서 의료분쟁조정원에서 의료분쟁 조정 절차를 하지 않고 법원에서의 직접 소송이 증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불비용 납부자가 보건의료기관의 폐업 등 보건의료업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납부한 대불비용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록 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신생아 뇌성마비는 소아청소년과 전문분야임을 감안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에 산부인과 전문의뿐만 아니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도 위촉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뇌성마비의 판단에 필요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 보건복지위원회 김현숙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근본 대책 마련 촉구

새누리당의 김현숙 의원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부정하게 사용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08년~2012년 7월까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부당청구 결정 및 환수실적을 검토한 결과, 총 17만4450건의 부당청구건이 적발되었다는 것이다. 사망일 이후 청구·중복수급·월 한도액을 초과 청구 등의 방법으로 급여사후부담에서 전체 적발건수의 66%인 11만5319건이 적발됐고, 건보공단 현지조사에서 4만393건(23.1%), 현지확인심사에서 1만8738건(10.7%)의 부당청구가 드러났다.

○ 보건복지부, 외국 의사 국내 환자 진료 제한적 허용 추진

복지부는 21일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현행 의료법에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 의사들 가운데,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개도국의 의사들이 한국에서 국내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 중인데, 의료행위와 관련된 승인절차 등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하다. 이에 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외국 의사 국내 연수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고, 엄격한 요건과 절차 아래에서 환자에 대한 진료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의도이다.

○ 진료과목별 전문의 5인이상 응급의료기관 태부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은 최근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의 진료과목별 전문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응급의료센터의 상당수가 당직근무를 유지할 수 있는 과별 최소 전문의 5인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개설한 진료과목 중 5명 이상의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흉부외과 11개소(55%), 산부인과 5개소(25%), 소아청소년과 4개소(20%), 외과 3개소(15%), 신경외과 3개소(15%), 마취통증의학과 2개소(10%), 정형외과 1개소(5%)로 나타났다. 또 115개의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개설한 진료과목 중 5인 이상의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산부인과 59개소(53%), 소아청소년과 58개소(52%), 마취통증의학과 53개소(46%), 외과 40개소(35%), 내과 13개소(11%) 등이었다. 총 278개의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개설한 진료과목 중에는 내과계열을 통합해도 133개소(48%)에서, 외과계열을 통합해도 127개소(47%)에서 5인 이상의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했다. 한편 온콜(on-call) 제도와 관련하여 응급의료에서 당직은 상주가 원칙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고, 이에 진료과목별 최소 5인은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인원이 충족되지 않고 응당법을 운영할 경우, 전문의의 장시간·연속근무가 불가피하고 결국 환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 대한의사협회, 최동익 의원실 과다청구 관련 언론보도 반박

최동익 의원실은 지난 19일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진료비 확인제도를 통해 접수된 민원 9만3393건 중 4만650건(43.5%)이 과다청구로 환급됐으며 그 금액이 총 156억원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의협은 자료가 심사과정에서 이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류된 진료비 확인요청 건수 대비 수치를 말하는 것이며, 전체 진료비 중 과다청구 비율을 따져보면 2011년의 경우 46조원 중 36억원이고, 그 비율은 0.008%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또한 진료비 확인신청으로 인한 환불결정액이 152억원(2007년)에서 36억원(2011년)으로 해마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의협은 병의원들의 허위·부당청구율을 실제 비율보다 부풀려 사회적으로 의사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고착화해선 안된다고 비판했다.

2. 보건의료산업-기술 / 2012 바이오코리아

○ 국립중앙의료원(NMC), '라이프&헬스케어센터' 개장

의료원은 10일 '라이프&헬스케어센터' 확장 오픈 행사를 열고 본격적인 고품격 종합건강검진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의료원은 소수의 전유물이었던 고품격 검진서비스를 값싸게 누릴 수 있게 했고, 3.0T(테슬라) MRI, 128 Dual CT 등의 최고급 진단장비를 갖춰 검사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개별 필요에 따른 1:1 맞춤 건강검진과 상담을 제공하고, 수술 치료가 필요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도 도입했다. 의료원은 민간병원의 유사 프로그램과 비교하면 거의 2분의 1에서 3분의 1 수준의 가격이라며, 이 같은 가격은 정부의 장비 지원과 임대료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12일 BIO KOREA 2012 개막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2일 일산 킨텍스 제2 전시장에서 아시아 최대 규모의 바이오산업 컨벤션인 '바이오코리아 2012'를 열었다. 개막식에는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 국회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진흥원 고경화 원장 등 국내 주요 보건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 200여개 기업과 국내의 약 500개 기업이 참가했다. 이 행사는 국제 규모의 제약·바이오 전문행사로 우수 기술·제품의 컨퍼런스, 비즈니스포럼 및 파트너링, 전시회로 구성되었다. 컨퍼런스에는 백신, 치료용 항체, 조직재생, 줄기세포, U-Health, 나고야 의정서 등 다양한 주제로 17개 트랙, 39개 세션이 열렸다. 특히 미국 5대 로펌 중 하나인 '수그루마이온'의 특허 전문 변호사들이 대거 참여해 특허에 관한 법률 세미나를 직접 구성했다. 이번 7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이전에 비해 규모와 내용이 풍성해졌고 성황리에 진행했다는 평가이지만, 무역협회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의 협력을 얻지 못해 해외 정보를 받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

○ 순천향대병원, 레이저 이용 내시경 조기위암 절제술 세계 첫 성공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소화기병센터는 레이저를 이용한 내시경 위암 절제술(ESD)을 처음 성공했다고 밝혔다. 레이저를 이용한 위암 절제술은 절개와 지혈을 동시에 수행하기 때문에 출혈이 없고 수술 시간도 단축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절개 부위 주변 정상 조직에 손상을 주지 않고 최소한의 절제로 암 조직을 제거하는 것이 장점이다. 지금까지 내시경 절제술은 전류가 흐르는 금속칼을 이용해 위암을 포함한 위 점막을 도려내는 방법을 사용해 왔다. 레이저 수술은 지금까지 심부 조직 손상의 위험성이 있어 소화기내시경 분야에서는 시도되지 않다가,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세계 최초로 레이저 수술을 소화기내시경 분야에 적용했다.

○ 교육과학기술부, 차세대 뇌영상시스템 개발 1천억 투입

교육과학기술부는 12일 향후 5년간 총 1094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차세대 뇌영상시스템'(14T MRI : 14 Tesla MRI System, 초고자장 자기공명영상 시스템) 개발사업' 착수를 위한 추진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는 뇌과학 분야에서 최첨단 기술구현 및 의료연구를 위한 인프라를 한국이 세계 최초로 확보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14T MRI 시스템 개발, 생체안정성 검증, 뇌구조·기능 연구, 영상기법 개발 등 14T MRI 시스템 활용연구, 연구시설 구축을 포함하는 연구기반 구축 사업이다. 차세대 뇌영상시스템 개발사업 추진자문위원회는 MRI 시스템 및 뇌연구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 바이오코리아 2012 성과

올해 7회째인 '바이오코리아 2012'는 해외 28개국, 국내의 530여 개사가 참석해 컨퍼런스, 비즈니스 포럼 등을 가졌고 약 1만8000명이 관람했다. 전시장 현장 상담건수는 1491건, 성사된 계약건수가 총 37건

이며 총 1600억원 규모의 수출계약을 맺었다. 17개 트랙, 44개 세션으로 구성된 컨퍼런스에는 202여명의 국내외 연사들이 백신, 바이오시밀러, 줄기세포, 치료용 항체, 맞춤형의학, 특허·라이센싱 등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특히 가시화된 줄기세포 치료제 상용화와 바이오시밀러, 백신, 특허 라이선스 트랙이 주목을 받았다. 비즈니스 포럼에는 약 313개의 해외 대형 제약기업 및 국내외 주요 제약사, 바이오 기업 등이 참여해 국내외 기업과의 파트너링을 통해 해외 진출과 연구협력이 추진됐다.

잡페어(job fair) 프로그램은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구직자에게 면접, 취업 컨설팅 등을 제공하고 국내 보건산업 업체에는 좋은 구직자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국내 32개 기업이 참가했다. 제약기업 중에서는 혁신형제약기업에 선정된 일동제약과 비씨월드제약이 참가했으며 관련 전공자와 취업 준비생들에게 1대1로 개별 면접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필요 정보를 제공했다. 13일까지는 1400여명이 참여하여 본래 목표인 800명을 웃돌았으며, 취업희망자 중 73명은 현장에서 바로 채용이 결정됐다. 팜페어(pharm fair) 프로그램을 통해 중동, 동남아 미주, 러시아권 등 해외 7개사와 약 800억원 규모의 수출 계약 및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흥국과 계약을 하게 된 6개 제약사는 동아제약, 유유제약, 삼양제넥스바이오, 한국콜마, 일동제약, 대웅제약 등이다.

○ 미국 치과기업들, 광주시에 3천만달러 투자

광주시 투자유치단은 지난 13일 미국 뉴욕에서 현지 기업들과 투자 및 수출협약 체결식을 갖고 총 1억 500만달러 규모의 협약을 체결했다. 치과용 매몰체 및 지르코니아 블록 3개 치과 기업과 3000만달러의 투자협약을 체결하여, 광주시가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형 치과산업 벨트구축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티아이(ETI Empire Direct)사와는 고품질 치과용 매몰체 생산을 위한 1300만달러 투자협약, 타나카 덴탈(Tanaka Dental)사는 치과용 지르코니아 블록 제조공장 설립을 위한 600만달러를 투자협약, 인터믹스(Intermix)사는 1100만달러를 들여 치과용 지르코니아 블록을 생산할 계획이다.

○ 제 16회 국제동양의학학술대회(ICOM), 전통의학 발전을 위한 서울 선언문 채택

이 행사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 COEX에서 '의학의 미래, 전통의학'을 주제로 열렸다. 대한한의사협회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와 한국관광공사 등의 후원으로 진행된 이 행사에는 50여 개국에서 1만60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총 38개국에서 318편의 학술논문과 포스터가 발표됐다. 그리고 세계 전통의학의 발전을 통해 인류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 큰 공헌을 하기 위해 각 국 전통의학 관계자들이 긴밀히 협조한다는 취지의 '2012 전통의학 발전을 위한 서울 선언문'이 채택됐다. 여기에는 각 국의 전통의학 관련 정책 및 법령의 정기적인 교류, 세계 전통의학의 데이터 구축을 통한 표준화와 객관화를 위하여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 적극 권고, 천연물 유래 의약품 적극 활용, 전통의학이 명실상부한 미래의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 대구에 국내 최대규모 메디텔(medi-tel) 조성 예정

메디텔(medi-tel)이란 호텔과 병원의 합성어로 치료와 숙박 및 휴식을 동시에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건물을 말하며, 최근 의료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대구 엘리디스리젠트 호텔은 지하 1층, 지상 18층 규모로 10월부터 착공할 예정이다. 12개층을 병원 및 뷰티 등 의료관광 관련 시설로 운영하고, 진료 과목도 건강검진·성형·피부·치과·안과 등으로 의료관광과 병의원이나 의사가 입점하게 된다. 또 호텔에서는 의료관광객에게 호텔객실을 저렴하게 입원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변의 근대 골목투어와 약령시·현대백화점 등 관광자원과 적극적으로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협력 위한 양해각서 체결

임채민 장관과 맹형규 장관은 19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양 부처의 국제개발협력(ODA)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은 개도국의 원조 수요가 높은 보건의료사업과 농촌지역 개발의 성공적 방법론인 새마을 운동을 결합함으로써 한국 ODA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추진됐다. 이

번 MOU 체결을 계기로 양 부처는 ODA 사업간 정책 연계, 협력사업 공동 발굴·수행, 연수프로그램 상호 활용, 해외 네트워크 및 정보 공유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미얀마 양곤지역에서 양 부처 협력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지난 7월에는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미얀마 정부와의 공동 정책 협의가 이루어졌다. 앞으로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새마을 회관이 건립되면 복지부는 회관내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고 기초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 인간게놈 단기간 해석장치 개발

도쿄소재 라이프 테크놀로지스 재팬에서 개발한 '이온·플로톤'이라 불리는 이 장치는 인간의 전유전자 정보를 단 24시간 안에 해석하고, 게놈 1인분의 해석비용도 1000달러에 지나지 않는다. 본체 가격은 약 3400만엔에 이른다. 상기 장치는 우표 크기의 칩에 있는 극히 작은 무수한 구멍에 DNA를 복제하는 재료를 주입하여 해석한다. 라이프 테크놀로지스 재팬 연구진은 DNA가 복제될 때 염기의 결합에 수반해 방출되는 수소이온의 농도를 측정해, 염기 배열을 읽어낸다고 설명했다.

3. 제약산업

○ PNH(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 환우회, 솔리리스 급여화 및 리펀드제 적용 촉구

PNH 환우회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PNH의 유일한 치료제인 솔리리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신속히 지원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10일 밝혔다. PNH 환우회가 건정심 위원들에게 보낸 서한에는,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용하고 있는 리펀드제도는 솔리리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반드시 본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내용과 솔리리스의 보험 급여를 통해 환자들의 치료제 접근이 시급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리펀드제도가 적용되는 대상 약제는 고가의 신약이므로 본인부담금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솔리리스에 리펀드제도를 적용해 환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게 환우회 입장이다.

○ 천연물신약 처방권 관련, 한의사와 의사 간 마찰 심화

현재 시판되는 천연물신약은 동야제약의 위염치료제 스티렌 등 7개이고, 모두 연매출이 성장 중이다. 한의사들은 천연물신약이 약사법과 한의약육성법에 근거한 한약제제에 해당하므로 천연물신약의 용어를 한약제제로 규정하고 관련 법규정을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양방의료계의 천연물신약 사용을 중지시킨 후, 천연물신약에 대한 한방급여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료계는 천연물신약도 엄연히 보험에 등재된 처방의약품이라면, 의사의 처방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천연물신약을 제조한 제약사와 처방권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려야 하는 복지부가 곤란한 처지에 놓여있다. 복지부는 약사법·의료법 등 관련법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고 있다. 약사법에 명시되지 않은 천연물신약을 누구의 처방 영역으로 볼 건지, 둘 다 처방 가능한지, 약제마다 다른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양측의 마찰이 국민의 건강을 배제한 직능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 5개 제약단체장, 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 공동건의문 발표

한국제약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회장단은 11일 시장형실거래가제도 관련 공동 건의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5개 단체장은 일괄 약가인하로 실익과 명분을 모두 잃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즉각적인 폐지를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1년간 유예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재시행하게 되면 1원 낙찰·공급 등 시장교란 행위가 늘어나 유통질서는 더욱 혼탁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일괄 약가와 사용량-약가 연동제도가 있는 상태에서 설거래가제도를 도입하면 경영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도약사회, 의약품 재분류 약사피해 최소화 방안 대한약사회에 건의

경기도약사회는 제8차 회장단 회의를 통해 약사직능과 관련해 불합리한 부분과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 및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에 대비한 대한약사회의 후속대책 문제점 등을 건의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약국에서 사전피임약 판매시 복약안내를 강제규정화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약사법상 일반의약품의 복약지도관련 조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약품 재분류는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사의 기준으로 재분류가 진행돼 전반적인 재검토와 함께 개선을 요구했다. 더불어 재분류 의약품의 사후처리를 제약사와 약국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2011 완제의약품 유통정보통계집' 발간

이에 따르면, 제조·수입사 공급액, 도매상이 공급한 금액, 도매상이 도매상으로 공급한 금액을 포함하는 2011년 총 의약품 유통규모는 44조1000억원에 달했다. 완제의약품 공급업체 수는 총 2419개소이고, 도매상은 1889개소, 제조사 300개소, 수입사 230개소였으며, 과반수(57.6%)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다. 의약품 생산 및 수입은 16조5000억원이며, 의약품 생산은 전문의약품 11조1000억원, 일반의약품 2조4000억원 등 총 13조5000원(82%)이었다. 수입은 전문의약품 2조9000억원, 일반의약품 1000억원 등 총 3조원 규모로 18%를 차지했다. 이번 통계집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발간된 것으로, 의약품 관련 일반현황 및 생산·수입실적, 공급실적, 직거래현황, 품목별 현황 등 총 5개 분야 58개 항목으로 구분해 내용을 수록했다.

○ 리펀드제도 본사업 전환 실패

복지부는 12일 25차 건정심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리펀드제도의 본사업 전환을 포기하고 시범사업 기간을 3년(2015년 9월까지) 연장했다. 리펀드제도는 표시가격과 실체가격과의 차액을 돌려받아 보험 재정 부담없이 표시가격을 높여주는 약가협상방법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09년 6월 제11차 건정심에서 대체제가 없는 희귀질환 치료제에 한해 1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도입된 이후 그동안 두 차례에 걸쳐 1년씩 시범사업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복지부는 3년간의 시범사업 결과, 환자들에게 리펀드 적용 약제가 원활히 공급되고 제약사도 표시가격을 지킬 수 있어 만족해하며, 공단으로서도 실체가격과의 차액을 돌려받아 보험 재정 절감을 꾀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 식품의약품안전청, 2011년도 의약품 생산실적 분석결과 발표

2011년 국내 의약품 생산실적은 15조5968억원으로 전년 대비 0.72% 감소했으며 시장규모도 19조1646억원으로 2010년에 비해 0.94% 줄었다. 국내 의약품의 세계 시장 점유율도 1.84%로 2010년 1.87%에 비해 소폭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 생산실적 중 완제의약품은 14조1094억원, 원료의약품은 1조4874억원으로 2010년에 비해 0.88% 감소하고, 원료의약품은 0.83% 늘었다. 완제의약품 생산실적 상위 3개 업체는 동아제약(7971억원), 대웅제약(6481억원), 한미약품(5341억원) 순이었고, 상위 20개사는 완제의약품 생산액의 50.8%를 점유하며 대형 제약업체 중심의 생산 구조를 이끌었다. 1000억원 이상 생산업체도 2010년 38개사보다 늘어난 40개사로 집계됐으며 이들은 전체 완제 의약품 생산액의 69.8%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완제의약품 국내 생산 상위 품목은 퀵박셀주, 스티렌정, 플라빅스정 등이었다. 2011년도 의약품 시장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오리지널 의약품은 감소세를 보인 반면 제네릭 의약품의 약진이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클로피도그렐 제제를 사용한 오리지널 플라빅스정의 2011년도 생산실적은 885억원으로 전년 대비 31.5% 감소했으며, 제네릭 의약품인 플라비톨정(동아제약)은 전년 대비 15.8%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 개발 신약 생산실적은 총 824억원(12개 품목)으로 2010년 654억원(9개 품목)에 비해 26.0% 증가하였고, 개량신약은 2011년 12품목이 생산됐으며, 생산금액 1011억원으로 전년 대비 54.2%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한편 국내 완제의약품 생산·수입 실적은 전문의약품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전문의약품은 11조3846억원으로 전체 82%의 비중을 차지했다. 국내 의약품 수출은 1조9939억으로 전년 대비 3379억, 수입은 5조6212억으로 2590억 증가해 높은 무역적자 폭을 나타냈다.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의 경우 수출

은 전년 대비 22.9%(원료), 7.1%(완제)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수입은 4.6%, 7.8% 증가했다. 수입실적은 일본-스위스-독일-미국 등의 순이었고, 수출은 일본-베트남-중국-인도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한편 식약청은 유럽시장 수출액이 증가하여 GMP의 품질경쟁력이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되었다고 해석했다.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수출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프랑스 의약 전문가들 처방약 50%는 쓸모 없는 약 선언, 58개 블랙리스트 발표

파리 소재 네커병원 필립 예방 전 병원장(의학박사)과 프랑스 야당인 대중운동연합(UMP) 베르나르 드 브레 의원은 프랑스 일간지 '르 파리지앵'과의 최근 인터뷰에서 프랑스 내 처방약의 50% 이상은 전혀 쓸모가 없는 약이며, 5% 정도는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약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 이들은 의료관련 최고 권위자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인물들로, 제약사의 압력으로 필요 없는 약들이 처방되고 있고 그 부담은 전적으로 프랑스 납세자들이 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근 공동집필한 책 '4000가지의 유용하거나 유용하지 않은, 또는 위험한 약물'에서도, 4000여종의 위험하고 쓸모 없는 약들을 처방하는데 프랑스 정부가 매년 100억 유로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가장 먼저 타깃이 된 약품은 GSK의 자이반(bupropion)으로, 한 때 기적을 낳는 금연약으로 각광받았던 제품이다. 미국 FDA는 지난 2009년 자이반에 대해 자살시도 등 정신계 부작용을 이유로 블랙박스 경고를 내린 바 있다. 성생활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진 GSK의 파킨슨병 치료제 리쿱(Ropinirole)도 아직 퇴출되지 않았고, 사노피의 티클리드(Ticlopidine), 노바티스의 가브스(Vildagliptin), MSD의 자누비아(Sitagliptin), 안센의 콘서타(Methylphenidate), 화이자의 챔픽스(Varenicline), 로슈의 아바스틴(Bevacizumab) 등을 58개 위험한 약에 뽑았다. 이들은 문제의 약물들이 아직도 처방되고 있는데, 정부는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한국BMS 영업인력 아웃소싱 문제, 국정감사 상정 여부

다국적 제약회사의 영업인력 아웃소싱(Outsourcing) 문제가 국정감사의 도마에 오를지 주목된다. 이 문제에 발단이 된 한국 BMS는 지난해 10월 인력 도급업체인 인벤티브헬스코리아와 CSO(Common Service Operation) 계약을 맺고, 영업사원 32명을 채용했다. 노조는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려는 회사의 꼼수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고, 노동부에 고발까지 한 상태이다. 전국화학노동조합연맹은 이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공론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제약사 전체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로 보고 있다. 그러나 노동부의 조사결과가 지연되고 있어, 국회에서 공론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B형간염치료제 '비리어드' 급여시장 진출

유한양행의 비리어드(테노포비어)는 60일만에 결친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이 17일밤 전격 타결되면서 급여시장에 진출하게 되었다. B형간염 치료제 1위인 한국 BMS의 바라크루드 수준의 약가를 요구했던 유한양행측은 공단과의 치열한 협상을 하였지만, 결국 5000원대 초반에서 약가를 타결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리어드는 9월말 건정심을 통과한 후 11월경부터 급여 혜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리어드는 5년간의 임상시험 결과 내성발현율이 0%로 나타났으며, 미국과 유럽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에 현재 B형간염치료제 시장의 60% 점유율을 기록하는 바라크루드의 전성시대는 사실상 끝나게 되었다.

○ 다국적 제약사 사노피, 대규모 인원감축 구조조정 계획 발표 예정

최근 잇단 약재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 사노피가 오는 25일 1500~2000명 규모의 대규모 인원감축을 골자로 하는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가 최근 보도했다. 이번 감축대상은 대부분 프랑스 내 인력으로, 퇴직 또는 이직을 통한 자연감소의 형태로 감축이 이뤄질 것이라는 것이 사노피측의 주장이지만 대규모 정리해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사노피는 지난 7월 이미 회사 노동조합에 프랑스 툴루주와 몽펠리에 지역 소재 파스퇴르 백신 부문의 연구 및 제조인력에 대한 대규모 감축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이와 관련해 25일 감축계획 발표에 맞춰 현지 노조원들의 대규모 시위가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사노피는 현재 프랑스에서 2

만8000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다.

○ 처방약시장 20개 제약사, 원외처방액 14% 감소

8월 원외처방액은 1304억원으로 전년 동월(1519억원)대비 1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두 자리수를 감소한 것은 제일약품 등 12곳이었다. 제일약품은 79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해 전년 동월(130억원)대비 39.2%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냈고, 동화약품은 28.9%, 명문제약은 23% 감소했다. 중소제약사 20곳 중 원외처방액이 증가한 제약사는 보령제약 1곳이며, 81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해 전년 동월(78억원) 대비 3.8%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제약업계는 국내 제약사의 생존전략이 필요하다는 것과, 다국적 제약사의 시장점유율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했다.

○ 다국적제약사,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 거의 포기

21일 '세계 알츠하이머의 날'을 앞두고 인디펜던트, 데일리메일 등 영국 언론들은 계속되는 경제불황으로 구조조정, 인원감축 등의 자구책을 쓰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들이 이른바 '돈이 안되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을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을 포기하고 있다고 19일 보도했다. 연간 50억 달러에 이르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연구개발을 진행하던 GSK·사노피·아스트라제네카·화이자·머크·노바티스 등 대형 다국적 제약사들이, 계속해서 임상시험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구조조정과 인력감축을 통해 규모를 줄이고 있다. 화이자와 존슨앤존슨은 바피뉴주맵(bapineuzumab)에 대한 임상시험이 2차례 실패로 돌아갔고, 일리아 릴리도 최근 솔라네주맵(solanezumab)의 임상시험이 실패로 돌아갔다. 영국 알츠하이머연구소 에릭 카란 박사는 이윤이 궁극목표인 다국적 제약사에게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행동을 기다리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초저가 낙찰 개선 방안 및 불용의약품 재고 해결 방안 마련 논의

도매협회 19일 서울 방배동 소재 협회 회의실에서 회장단회의를 열고 입찰시장에서의 초저가 낙찰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고, 상임위원들은 초저가 낙찰을 근절하기 위해 입찰제도 개선을 추진해야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간 회원사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등의 노력을 했지만, 보훈병원의 재입찰과 부산대병원의 입찰에서도 초저가 낙찰이 속출했다. 이에 협회는 의약품 입찰제도가 초저가 낙찰제도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경우, 초저가 낙찰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입찰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제도개선을 통해 도매상들은 구입가 미만 제품은 판매할 수 없도록 만들고, 제약사들은 생산원가 또는 공장도출하가 미만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정부당국에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불용의약품 재고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불용의약품 재고 파악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정확한 수량을 확인한 뒤 제약사별, 제품별 분석을 통해 추후 세부전략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불용의약품 프로그램은 협회 홈페이지에 신설되며, 15만가지 의약품 표준코드를 업로드해 해당품목에 따라 각 업체가 수량, 제조번호, 유효기간 등을 입력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정책연구소 설립 추진방안과 중소도매를 위한 구색·구매 사이트 및 참고 규제 철폐 등 진행사항도 보고됐다.

○ 국내제약사, 사노피 항혈전 복합제 특허소송 승소

국내제약사가 다국적 제약사인 사노피를 상대로 제기한 '클로피도그렐-아스피린 복합제' 특허소송에서 승소했다. 특허심판원 제7부는 최근 사노피사의 항혈전 복합제 특허에 대해 CJ제일제당, 유나이티드, 종근당 등이 제기한 무효심판 청구를 인정했다. 사노피사의 항혈전 복합제 특허는 혈전용해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물인 '클로피도그렐'과 '아스피린'의 복합제를 특허청구한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기능을 갖는 두 가지 약물의 혼합으로 놀라운 만한 효과가 인정되지 않으면 특허받기가 쉽지 않다. 클로피도그렐에 대한 물질특허는 이미 2003년 만료했으나, 후속특허들이 연속적으로 있어 국내 제네릭사들은 제네릭 출시와 함께 후속특허들의 장벽에 부딪혀 왔다. 이 사건을 담당한 안소영 변리사는 이 것이 허가-특허 연계 제도에 대비해 특허도전을 미리 계획한 회사들이 시장을 선점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4. 의약 단체 동향

○ 간호사-간호조무사, 천안에서 충돌

간협과 간무협은 9일 오전 양승조 의원의 지역구인 천안에서 각각 '의료법 제80조 개악 철회 촉구 결의대회'와 '의료법 개정안 통과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치열한 선전전을 벌였다.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간호실무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면허 취득 및 면허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천안역 서부광장에서 열린 간협 결의대회에는 전국의 간호사와 간호학과 학생, 가족 및 일반인 등 4000여명이 운집했다. 이들은 개정안이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인 것처럼 포장에 병원 노동자들에게 저임금을 지급하고, 중소병원의 이윤을 더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대선에서 간호사들의 조직적 힘을 발휘하고, 법정인력 기준 미준수 의료기관 고소·고발과 병원 인력의 지위 향상을 위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간무협은 같은 날 천안시 동남구에서 500여명의 회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의료법 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이 법이 통과되면 간호조무사의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이 통과되면 간호조무사가 간호사가 된다는 것은 억측선동에 불과하고,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를 간조, 조무사 등으로 부르고 있는 것에 대한 불감니 크다고 말했다. 이날 간무협 회원들은 의료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양승조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직접 전달하려 했지만, 간협과 마주칠 것을 우려하는 경찰의 저지로 무산됐으며 하늘공원 앞마당에서 집회를 마무리했다.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의료법 개정 관련 대한간호협회 공식 입장 요청

강순심 간무협 회장을 12일 간담회를 갖고 양 단체가 소모적인 논쟁을 중단하고, 조속히 만나 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법이 통과되면 의원급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들의 영역까지 침범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간협에 요청했다. 간무협은 최근 의사커뮤니티 사이트인 닥터플라자(닥플) 내에서 간호조무사를 성적으로 비하한 것에 대한 대책으로 음란물 추방 운동 등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 대한의사협회, 의료악법 규탄대회 전개

의협은 13일 오후 3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국민건강 위협하는 의료악법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는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의료계 집회이고, 악천후에도 불구하고 500여명의 의사회원들이 운집하였다. 노환규 회장은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의 새판을 짜겠다며, 정부가 시행하는 포괄수가제 강제시행·만성질환관리제·의료분쟁조정법·액자법·응당법 등의 의료 악법을 규탄했다. 노 회장은 불합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뢰받는 의사상을 구축하고, 의료계 자체에서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의사들이 힘을 뭉쳐 전문가 단체로서의 힘을 되찾아야 하고, 정부독단에 따라 추진되는 의료관련 법에 대한 분명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후 진료를 접고 참석한 의협 회원들은 '환자 위한 최선 진료, 국가가 보장하라'는 문구가 적힌 수건으로 퍼포먼스를 보이고, 황인방 전국시도의사회장 등 7명의 의료계 지도자들이 얼음에 얼린 의료악법 팻말을 도끼로 깨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서울역 집회를 마친 의사들은 광화문 인근까지 도보로 이동한 후 해산했다. 마지막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포괄수가제 재검토, 응당법 폐기, 만성질환관리제 수정 등의 내용을 담은 대정부 요구안을 채택했다. 이를 통해 포괄수가제 재검토, 합리적인 응급실 당직제 마련, 의료수가 현실화 등의 대정부 안을 채택했다. 또한 합리적인 응당법 폐지와 의료분쟁조정법 재설계, 액자법 철폐도 요구했고, 원가 이하의 비현실적인 의료수가 역시 현실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 치과기공사협회, 틀니수리 기공료 권고 예정

치기협은 13일 수리에 관한 기공료를 9월 중 지부장들과 협의하고, 지부회를 통해 치과기공소 경영자들에게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복지부가 지난 12일 제25차 건정심에서 유지관리비용 급여화를 심의·의결해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복지부는 사후수리 급여 대상으로 보험급여 이전의 틀니 장착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결정하고 수가를 확정할 바 있다. 또한 집행부들이 움직여 치과기공사들이 틀니 급여화에 대해 정당한 기공료를 받기 위해 노력을 보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대한의사협회, 각 시도별 의료현안 정책간담회

의협은 오는 20일부터 의료현안 정책간담회를 각 시도별로 개최한다. 이번 자리는 최근 포괄수가제 강제시행, 응당법, 의료윤리 문제 등 의료현안에 대한 회원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또 오는 10월 7일 일산컨텍스에서 개최 예정인 한마음의사가족대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노환규 회장을 비롯해 의협 상임이사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정책간담회는 오는 9월 하순부터 전 시도에 걸쳐 진행된다.

○ 20일 심상정 의원 주최 '암 예방 특별법 대토론회' 개최

최근 휴대전화 전자파와 디젤 엔진 연소물 등 발암요인의 생활 속 임의 노출이 국민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 효과적인 발암요인 관리 및 예방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토론회에서 산업계·노동자·시민단체 등은 이 같은 내용의 '암 예방 특별법'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임종한 인하대학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국내 폐암의 26.1%는 직업적인 노출에 기인하고, 발암물질에 직업적으로 노출된 인구는 국내에서 최소 78만명 ~ 최대 186만명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은 생산-유통-폐기-재활용 과정에서 발암물질의 노출이 심각하고, 이에 대한 기초자료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들은 암예방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며, 발암물질을 안전한 물질로 '우선 대체 의무' 법제화하는 대책을 촉구했다. 이는 발암물질을 사업장에서 사용할 때 이를 대체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그럴 수 없을 경우 노동자들에게 위험물질을 최소한 노출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암 예방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교육 관리체계도 필요하다는 입장도 전했다.

5. 기타

○ 유행성출혈열(한타바이러스) 사망자 속출

한타바이러스는 쥐의 배설물 등을 통해 감염되는 한타바이러스는 감염자 3명 중 1명이 폐 기능 이상으로 사망하는 무서운 질환이며, 이번 한타바이러스 발생이 북미산 흰발생쥐에서 유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웨스트버지니아주 카나와 카운티 보건국은 최근 질병으로 사망한 지역 주민에 대한 역학 조사 결과, 1명이 더 사망하여 희생자가 총 3명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8명이 유행성 출혈열에 감염됐으며 치료방법은 아직 알려지지 않아 요세미티국립공원을 방문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공포감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감염자 8명 중 5명은 병세가 호전되거나 회복 중이라고 공원측은 설명했다. 요세미티 공원측은 정보를 투명하게 모두에게 공개할 것이라며 만일 어떤 징후를 느낀다면 곧바로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도록 당부했다.

○ 국내에서 신종플루 바이러스 출현

WHO 연구진과 공조작업을 하고 있는 한국 과학자가 포함된 연구진은 10일자 미국립과학아카데미 회의에 발표한 연구논문에서 새로운 신종플루 바이러스가 한국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 바이러스는 돼지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Sw/1204로, 족제비가 감염되면 10일 이내에 죽으며 침이나 기침·재채기 등에 의해 감염될 가능성도 있다. 연구진은 TRSw, 즉 바이러스-사람, 돼지, 조류의 3중 조합 바이러스(triple-reassortant swine influenza A (H1) viruses)가 한국의 격리된 돼지 도축장에서 발견됐다고 설명

했다. 이 바이러스는 1998년 북미에서도 발견된 적이 있는 바이러스 유전자와 연관이 있으며 Sw/1204는 이 중 하나다. 연구지는 이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도, 잠재적 위험성을 경고했다.

○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사망자 118명, 감염자 2636명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12일 현재 웨스트나일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118명, 감염자는 2636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1999년 미국에서 첫 감염자가 보고된 이후 가장 많은 희생자로, CDC는 특히 텍사스에서 전체 감염자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크게 늘고 있다면서 주의를 촉구했다. CDC는 그러나 통상적으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유행은 8월 중순을 피크로 잦아 들면서 곧 수그러질 것으로 전망했다. 웨스트나일열은 우리나라에서는 법정 감염병 제4군에 속하나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보고된 바 없다.

○ 산부인과 전공의 후기 모집, 66명 모집에 2명 응시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지난 8월에 있었던 2012년 산부인과 전공의 후기 모집결과 총 66명 모집 정원 중 단 2명이 지원해, 후기 전공의 확보율이 3%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렇게 지원율이 저조한 것은 이미 알려진 대로 저출산, 강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및 의료 소송의 위험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산부인과는 대표적인 기피과로, 전공의 지원율은 7년 연속 50~6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올해 7월 학회에서 조사한 '전국 산부인과 전공의 수련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공의 시작 5개월 만에 14명이 수련을 포기했다. 이에 학회는 산부인과의 위기는 국가적 위기로 이어진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100대 병원 슈퍼박테리아 4만5000건 발생

국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2012년 7월까지 국내 100대 상급·종합병원 슈퍼박테리아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년 7개월동안 서울대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 등을 포함한 국내 100대 병원에서 4만 4867건의 슈퍼박테리아 발생건수가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으나 복지부는 이에 대해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는 슈퍼박테리아 발생 및 치료를 개별 병원에 맡기고, 슈퍼박테리아 관련 허위 신고 등에 대해 한 번도 처벌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복지부가 공개한 자료가 발생건수 누락 등을 이유로 정확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슈퍼박테리아 발생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이 마련돼 있었고, 슈퍼박테리아 발생건수가 실제로는 더 많을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슈퍼박테리아 예방대책으로 복지부가 자체보고 받아 국회에 제출된 자료의 정확성을 의문시하는 것은, 그동안 복지부의 현황파악과 대책마련을 위한 노력이 그만큼 부족했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 보건의료노조 경희의료원지부 산별현장교섭 극적 타결, 전면파업 철회

보건의료노조 경희의료원지부가 지난 20일 저녁 병원 측과 극적으로 합의해 21일로 예정했던 전면파업을 철회했다. 경희의료원지부는 지난 5일 산별현장교섭 조정신청 후 전면파업을 배수진으로 10번의 본교섭과 13번의 실무교섭을 거치고 2차례 조정회의를 진행했고, 마지막 조정회의에서 임금·단체협약은 물론, 산별요구안 관련 극적합의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이는 보건의료노조 소속 사립대 병원 중 최초로 산별협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노사 양측은 사립대병원 발전과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 등 한국 의료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 등을 합의했다. 단체협약에서는 노사동수 인사소위원회 구성하여 인사평가제도·적정인력산정 등 논의, 인력 20명 충원, 배치전환 기준마련, 병동근무표위원회 운영, 관리자 평가제도 개발, On Call 제도 개선, 프리셉터 활동비 지급, 무급휴직 확대(10년에 1년), 간호본부, 1일 8시간에 상당하는 교육·학회 참석 시 공가 인정, 보수교육비 연간 1회 한해 실비 지급 등을 합의했다. 임금은 총액 3.5% 인상하고 일시격려금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 이화의료원 파업 관련 동향

이화의료원, 한양대의료원, 경희의료원, 고대의료원, 아주대의료원 등 수도권 5개 사립대학병원이 5일

파업에 들어갔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이화의료원은 오늘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고, 4개 사립대병원 은 오늘 하루 파업을 벌인 후 병원별로 교섭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대의료원 노조는 연일 병원 로비에서 집회를 갖고 임금인상 등 병원 측의 협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병원 측은 산별교섭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여서 파업 장기화가 우려된다. 병원 측에 따르면 집회 참석인원을 줄고 있지만 연일 수십여명이 목동병원 로비에서 파업을 벌이고 있으며, 필수유지인력 이외에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 병원은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대체인력을 동원하거나 행정직원들의 진료안내 등 업무를 재배치했지만, 파업으로 인해 외래환자가 평소보다 20~30% 줄었다.노조는 이화의료원의 임금이 사립대병원 중 최하위라며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을 요구하고 있다. 병원 측은 산별교섭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14일로 파업 10일차를 맞은 이화의료원 노조 조합원 140여명이 박원석 의원실을 통해 국회견학을 신청했지만 당일 국회사무처로부터 거절당했다. 이들은 국회 내 건물은 물론 경내에도 받을 던지 못했다. 국회사무처는 파업 중인 노조원들이 집단으로 국회 경내에 출입하면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출입 불허 이유를 설명했다.

이화의료원 파업과 관련해서는 몇 가지 쟁점이 있다. 1) 126년 역사의 명문여성사학이라는 이화재단 소속 여성대학병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조 무력화 논란이다. 최근 SJM 용역폭력, 유성기업 노조 무력화와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창조 노무법인(창조컨설팅) 심종두 노무사와 버젓이 자문계약을 맺고 노조 무력화라는 반사회적이고 전근대적인 범죄행위를 다른 곳도 아닌 이화재단 산하 대학병원에서 벌이고 있다는 것이 충격적이다. 2) 지난 2010년 21일간 진행된 고대의료원 파업 때 던진 화두였던, 환자 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외형적 성장과 병상 증축, 장비에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에게 투자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있다. 급변하는 의료 환경 속에 대학병원 경영철학과 미래 발전전략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3) 노사관계 측면에서는 기업별 교섭체제에서 산별 교섭체제로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행할 것인지, 쟁의권과 공익의 조화를 내걸고 2008년 시행된 필수유지업무제도가 과연 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면서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사용자 편을 들고 있는지 등이 쟁점으로 드러나면서 이화의료원 파업 양상은 한국 의료와 노사관계의 현주소, 그리고 미래 과제가 한꺼번에 응축되어 나타나고 있다.

21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성명서를 통해 이화의료원이 보건의료노조 산별협약을 무시한 채 민주노조를 무력화하고 파업 장기화를 유도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은 노조 파업은 합법임에도 불구하고 중간관리자들이 조합원들에게 밤낮 가리지 않고 수시로 전화 등을 통해 파업 대오 이탈과 현장 근무 복귀를 종용하고 있고, 심지어는 농성장으로 들어와 조합원을 끌고 가기까지 한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2일 파업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화의료원 노조에 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병원과 노조는 현재 별다른 합의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화의료원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 참가자들에게 근무하지 않은 만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가 이화의료원에 대한 보건의료노조 파업을 지지하고 나섰다.